

경제교육의 문제점과 사회적 수요 증진 방안

- 사회 : 김세원(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 발표 : 박명호(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토론 : 이승철(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전택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교수)

경제교육의 문제점과 사회적 수요 증진 방안

박명호(한국외대 경제학부 교수)

- I . 문제의 제기
- II . 경제교육의 내용과 목표
- III . 경제교육, 과연 충분히 제공되고 있나?
- IV . 경제교육 수요, 어떻게 늘릴 수 있나?

“First is the surge of popular demonstrations against so-called globalization, which, in a sense, can be interpreted as really against capitalism. ... Many of the young people—and I think they are mostly young, although I saw some demonstrators out here about a month ago and I wasn’t entirely persuaded—most of the young people involved take part, I think, because they really have the best of humanitarian motives and I think they really do mean very well. But very often, at least according to my understanding and I think the understanding of most economists, what they are advocating is almost exactly the opposite of what they think they are trying to achieve. What they are saying they want to do and what effect it will have is exactly opposite. ... But sometimes it’s self-interest and OK; but when, in fact, well-meaning people are advocating things that will achieve the opposite of what they intend, I get a little bit more concerned (Anne O. Krueger, first deputy managing director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02).

1. 문제의 제기(변화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왜 경제교육이 필요한가?)

□ 경제교육의 필요성/중요성

- 청소년의 낮은 경제이해도 및 왜곡된 경제관
 - 한국적 특수성: 입시 구조에 의한 학교 경제교육 왜곡
 - 한국 청소년층의 낮은 경제 이해도
 - 청소년의 반 시장 성향에 대한 Krueger 교수 언급
- 불충분한 학교 경제교육
 - 교사 공급 체계 미흡: 사회과 교사 공급 체계 개선 필요성(경제 전공 만들기)
 - 독립 과목으로서의 경제과목 위상 만들기
 - 지리과목과 비교 시 경제과목 중요성이 얼마나 낮은지
 - 입시 위주 교육 및 (학생들의) 경제 과목 선택권 결여

□ 변화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증대하는 경제교육 수요

- 고령화 사회: 연금생활자의 증가
 - 고령화 사회로 은퇴기간이 장기화 되면서 연금 역할 중요시 되면서 연금에 대한 정보 확대와 인식 변화가 동시에 수반되어야 함.
 - 특히 대다수 국가에서 공적 연금 수준이 줄어들며 연금도 확정 급여 형에서 확정 기여 형으로 전환되면서 연금 제도의 변화 및 개인의 투자 결정에 필요한 금융 교육의 필요성 대두
 - 우리나라 경우 확정 기여 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29% 가량이지만 향후 전 세계 추세와 같이 확정 기여 형의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큼
- 금융시장의 변화
 - 기술진보와 더불어 도소매 금융업이 지속적으로 발전
 - 너무 많은 금융상품과 금융정보로 금융시장의 복잡화

- 소비자가 금융시장에서 보다 많이 참여
 - 개인들의 펀드 상품 구매 및 주식 시장 참여가 증가 추세
- 잘못된 금융 의사 결정의 결과가 보다 심각해질 수 있음.
 - 개인 부채 증가 속도가 우려할 수준
 - 서브프라임 시장 문제 역시 잘못된 금융 의사 결정의 소산물
- 금융이해도 수준이 변화하는 환경에 비추어 너무 낮음.
 - OECD 국가 대상 서베이 결과 교육수준이 낮고,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금융이해도가 낮은 악순환
- 고용 및 연금 체제의 변화
 - 안정적이고 장기 고용 일자리가 점차 줄어들면서 금융 수요도 변모
 - 연금 제도도 향후 지속적으로 변화 예상

□ 해외 사례의 시사점

- 미흡한 경제교육 공급 체계 확대
 - 외국에서 보다 적극적인 경제교육 강화
 - 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 등 각국 정부는 경제 및 금융 교육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OECD 및 EU 등도 회원국 경제성장 위해 경제교육 필요성을 인식하고 경제교육 강화를 권고

II. 경제교육의 내용과 목표(우리의 경제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1. 경제학과 경제교육

- 일반적으로 경제학이란 “경제 현상을 대상으로 하여 생산과 교환, 분배와 소비 등의 법칙을 연구하는 학문”¹⁾을 지칭함.
 - － 경제학의 목적은 경제현상에 대한 과학적 연구
 - － 경제학의 방법은 자연과학에서와 같이 가설 설정과 검증의 과학적 절차에 기초하여 특정한 경제현상, 즉 사실(what is)을 객관적, 논리적, 가치중립적으로 기술하고 분석하여 복잡한 요소들의 인과관계를 밝힘으로써 개념과 일반화를 통한 이론을 형성
- 한편, 경제교육은 사회과의 한 영역으로서 사회과의 목표인 시민성 육성을 추구함²⁾.
 - － “경제적 시민성”은 경제문제 해결에 있어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사회참여를 통한 책임 있는 민주시민의 육성을 목표로 함.
 - － 경제학은 수리적 모델에 의존하며 논리에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의사결정능력을 개발하고 연습시키기에 적합한 분야라고 할 수 있음 (Michael, 1981).
 - 경제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경제학적 지식, 개념을 통한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사회참여 능력을 키우는 것임
- Buckles(1991)에 따르면 경제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당화는 그것이 논리적인 훈련이고, 주의 깊은 사고라고 지적
 - － 경제학은 이성적 방법으로 상황과 문제들을 분석하는 학생들의 능력

1) 동아 새국어사전 제5판.

2) 참고로 최병모 외(2004)는 경제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음.

	유형 1	유형 2	유형 3
목표	경제학적 지식, 경제적이해력(economic literacy)	경제문제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력	경제적 공민성과 경제사회화
내용	경제학적 사실과 개념, 일반화와 법칙	개인, 사회적인 경제문제 중심	경제윤리 및 시민의 역할, 경제 제도와 조직
주요 방법	주론적 사고 및 지식의 구조화	사회과학 탐구와 가치 탐구	교화 및 전달

을 향상시킬 수 있음.

- 경제의 이해는 개인적,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사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제적 측면에 대한 이해가 개인들에게 소비자, 생산자, 노동자, 그리고 시민으로서의 기능을 잘 하도록 하는데 기여함.
- 경제교육 과정과 방법은 도구로서 경제학적 지식의 습득과 사고방식의 훈련이 이루어져야 함.
 - 경제교육의 목표는 학생들이 개인 혹은 사회에 관한 경제의 문제점들을 분석하기 위해 합리적인 방식으로 경제학의 개념들을 사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경제교육은 주입식 교육으로서가 아니라 경제개념의 사용과 의사결정을 위한 과정의 사용으로서 제시되어야 함.
- 즉, 경제교육의 내용은 경제적 시민성 육성의 목적에 적합한 내용을 모 학문인 경제학으로부터 선택·추출해서 재구성
- 경제교육은 단순히 경제학의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경제 생활에서 올바르게 실천하는 시민을 기르고자 하기 때문에 시민성의 육성에 도움이 되는 지식들만 선택·추출하여 효과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
- 노벨상 수상자인 토빈(J. Tobin)
 -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일생동안 밥벌이를 하는 사람, 소비자, 그리고 시민과 유권자로서 수많은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때 사람들은 그들에게 경제적으로 올바른 정보뿐만 아니라 그릇된 정보를 수도 없이 마주치게 된다. 그러므로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보들의 유용성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능력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경제학 교육이다”라고 하면서 경제교육의 중요성을 강조

2. 우리나라 경제교육의 당면 과제

□ 현행 제7차 교육과정과 2007년 2월 개정 고시의 문제점

- 우리나라의 학교 경제교육 과정은 국가가 주도한 사회과 교육과정의 일부분으로 편재되어 있음.
 - － 현재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경제교육과정이 적용 중임.
 - － 2007년 2월에 고시된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2009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새로운 경제교육과정이 적용될 예정임.
- 제7차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주로 사회과의 4~5학년을 중심으로 경제교육 내용이 집중되어 있음.
 - － 3학년에서는 주로 시장과 생산, 유통에 관한 내용들을 자신의 고장을 중심으로 파악하도록 하고 있고,
 - － 4학년에서는 지역을 중심으로 생산, 시장, 소비, 가정 경제와 관련된 내용을 새롭게 배우고, 3학년에서 배운 시장, 생산, 유통의 내용을 지역을 중심으로 재 적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 － 5학년에서는 우리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주로 생산, 경제성장과 변동에 관련된 개념이 다루어지고 있으며,
 - － 6학년에서는 국제 경제와 관계되는 내용들이 다루지는데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지구촌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는 갈등 및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 7학년부터 10학년 사이에 적용되는 중등학교 국민공통기본과정에서 경제교육 내용은 주로 9학년, 10학년에서 다루어지는데 9학년과 10학년에 개설된 경제교육과정은 내용상 연계의 정도의 큰데 상대적으로 9학년이 미시영역을 다룬다면, 10학년에서 거시와 국제 경제개념 및 주제를 취급하고 있음.
 - － 중학교에 해당하는 7학년에서 9학년 사이에서는 집중적으로 9학년에 경제생활과 경제문제, 시장 경제의 이해 그리고 국민경제의 이해로 나누어 중학교의 경제교육 전체가 망라되고 있음.

- 현행 교육과정에서 중학교와 일정부분 경제교육의 내용을 분담하였던 10학년의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경제교육 내용이 삭제되었으며, 다만, 문화, 정의, 세계화, 인권 그리고 삶의 질이라는 통합적인 주제 아래서 이들 현상을 주요 학습 주제로 삼고 있음.
- 10학년 과정에서 경제교육 내용의 삭제는 11학년 진급 시 학생들로 하여금 선택과목인 ‘경제’과목을 선택할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공통기본과정에서 경제교육 내용의 삭제는 재고되어야 할 것임.

□ 낮은 경제교육 비중

-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에서 경제교육은 7-10학년 기간 중에 배우게 되는데, 총 수업 시간 중 경제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1%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사회과 총 수업 시간 중 경제교육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6~7% 수준에 그치고 있음.
- 11~12학년에 해당하는 선택중심 교육과정에서 경제 과목은 사회과목 전체의 9.7%에 불과한 실정임(전홍택·김진영(2006)).
-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사회과목 선택 현황을 보면 경제과목 선택은 총 9개의 사회과목 중에서 한국근현대사, 한국지리, 사회문화에 이어 4위를 차지
 - 수능시험 사회탐구영역 과목별 응시자 현황에서도 경제과목은 총 11개 과목(윤리 및 국사 추가) 중에서 6위를 차지하고 있음.
-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배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과목 선택에 대한 개선이 필요
-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경제교육에 대한 낮은 관심은 청소년들을 책임 있는 경제주체로 성장시키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수 있음.
- 현행 입시위주의 교육제도 하에서는 경제 과목을 선택할 유인이 매우 낮다는 점 역시 매우 심각한 문제임.
 - 학생들이 외우기 편하고 쉬운 과목을 선택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경제 과목의 기피현상은 심화되어짐.

□ 부실한 교사 공급체계

- 중, 고교 경제교육과 관련되어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는 경제관련 전문교사의 부족임.
 - － 사회과목 교사중 경제학을 전공한 수가 극히 미미할 뿐만 아니라, 교사들에 대한 재교육·보충교육 장치도 매우 미흡한 실정임.
 - － 사회과 교사 대부분이 일반사회교육과에서 양산되고 있는데 향후 경제과 전공 학생의 교사 기회를 확대하여야 함.
- 미국의 초중등학교에서도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은 교사들이 경제 과목을 담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이지만 미국의 경우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우리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고 있음.
 - － 미국의 경우, 이런 교육체계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NCEE는 교사들을 위한 교육 커리큘럼의 제공, 워크숍 개최, 경제교육자료 제공 등을 통해 교육현장의 애로점을 상당 부분 보완해 주고 있음.

III. 경제교육, 과연 충분히 제공되고 있나?

1. 경제교육, 누가 담당하나?

- ☐ 학교 교육은 일생동안의 경제생활에 있어 기본이 되는 기초지식 습득과 올바른 경제의식 함양에 중점
 - 학교 밖 교육은 경제교육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경제이슈에 대처하거나 생애 단계에 적합한 교육내용을 습득
 - － 외환위기, 신용불량자 문제 발생 이후 학교 밖 경제교육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 경제교육의 Spectrum중에서 공공재적 성격이 강할수록 공교육을 통해 보편적인 교육내용을 공급할 필요가 증대
 - 경제교육, 그리고 최근 전 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금융교육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 경제교육의 강화가 전제되어야 함.
 - － 사회적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금융교육 역시 학교 경제교육과의 연계 없이는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음.
- ☐ 학교 경제교육과 학교 밖 경제교육의 구분
 - 학교 경제교육은 기본적으로 공교육 체계 내에서 공급되어지는 반면, 학교 밖 교육은 시장시스템에 의해 충족되어지는 것이 바람직

< 학교교육과 학교 밖 교육의 비교 >

	학교 교육	학교 밖 교육
교육대상	· 청소년	· 일반인, 직장인, 은퇴자
교육내용	·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분야 (기초지식, 경제의식)	· 시장재적 성격이 강한 분야 (심화지식, 금융설계)
교육시스템	· 공교육에 의해 무상으로 실시	· 시장시스템에 의해 유상으로 교육수요를 충족

자료: 재정경제부(2007)

- 학교 밖 경제교육은 교육을 주관하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공급자 위주로 운영되어질 수밖에 없음.
 - 이 경우 경제교육과 기관 홍보가 중첩되어 경제교육의 왜곡 가능성이 있음.
- 학교 밖 경제교육에서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가 필요한 영역이 존재
 - 수도권 위주의 경제교육 운영으로 수도권과 지방간 경제교육 격차 (Econ-Edu Divide)가 확대
 - 민간 기관들의 100여개 프로그램 중 지방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3개 정도에 불과
 -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업무 협조 및 지자체의 경제교육 역할 강화 필요성 증대

2. 경제교육 강화, 우리나라만의 문제인가?

□ 해외 사례

- 미흡한 (공공재로서의) 경제교육 공급 체계 확대
 - 외국에서 보다 적극적인 경제교육 강화
 - 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 등 각국 정부는 경제 및 금융 교육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OECD 및 EU 등도 경제교육 필요성 인식
- OECD 경제교육 중요성 인식하고 2003년부터 Financial Education Project 실시
 - 1단계: 금융 교육 위한 전문가 발굴 및 중요한 이슈 관련 질문지 작성 및 조사
 - 개인의 금융이해도를 가장 효율적으로 향상시킬 전략 개발
 - 2단계: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금융이해도 관련 심층 분석하여 금융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모색

- 연금 관련 금융 교육 중요성 부각
 - 개인: 은퇴 후 금융 관련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고용주: 노동력을 보다 생산적으로 활용하고 병가로 인한 노동 손실 예방
 - 정부: 연금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 저축률 상승, 조사비용 감축 등
- 또한 많은 국가에서 공적연금 수준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고 연금도 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연금제도의 변화 및 개인의 투자결정에 대한 금융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의 은퇴 후 소득 중 공적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과 DC형 퇴직연금에 대한 금융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최근 OECD가 발표한 회원국 대상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을 포함한 19개국이 연금 및 퇴직에 대비한 저축 관련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EU 역시 금융교육 강화 위한 공동체 및 회원국 차원의 지원 필요성 강조
 - 금융교육 강화가 EU 기관 및 시장 참여자를 위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EU도 최근 27개 회원국의 금융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교육 강화 방안 마련
 - EU 회원국 간 금융 이해도의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국가 간 교육 프로그램 차이도 많음.
 - 개인 차원에서의 필요성 증대
 - 근로생활의 불안정성 증대, 취약해진 사회보장 제도, 개인 부담 증대 등
 - 수명 증가 및 생활환경 개선에 따른 경제교육 수요의 지속적 증대
 - 금융상품의 복잡화
 - 금융시장의 규제 완화 + 금융 상품의 다양성 증대 + 정보 홍수
 - 금융교육 강화가 EU 기관 및 시장 참여자를 위해 중요

○ 미국

- 1949년에 설립된 NCEE(National Council on Economic Education)는 교사 경제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경제에 대한 기본지식과 개인 신용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학계, 사회과 교사 등을 주축으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민간경제교육기구
- 전 학년에 걸쳐 표준화된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미래에 올바른 소비자, 생산자, 노동자, 투자자 등으로 성장하도록 목표 설정
 - 특히 경제교육 담당 교사들의 네트워크 형성과 함께 인센티브를 통해 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 NCEE는 현재 미국 내 7만개의 학교에서 12만 명의 교사와 750만 명의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경제교육을 수행하고 있음.
 - 예산 면에서는 2004년 경우 미국 정부로부터 530만 달러, 기부금 400여 만 달러, 교재판매대금 120만 달러를 포함해 총 1천만 달러에 이르고 있음.
 - 이 중 83%를 교사 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서비스에 지출
- 민간조직인 NCEE가 미국 전역에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배경은 시장경제를 바르게 교육시키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여준다는 확신 때문임.
 - 미국의 많은 기업이 NCEE를 지원하는 이유 역시 여기서 찾을 수 있음.
 - 고교 졸업생들의 경제과목 수강비율은 1982년 24%에서 2000년에는 50%대까지 크게 증가
- 시장경제 체제가 가장 잘 구축돼 있다는 미국에서도 지난 수년간 경제 주체들의 경제문맹 퇴치를 목적으로 한 캠페인(Campaign for Economic Literacy)을 전국적으로 확산
- 2004년 의회를 통과한 No Child Left Behind(낙오아동방지법)에 의해 Excellence in Economic Education을 학교 경제교육에 포함시켜 추진
- 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Financial Literacy and Education Improvement Act를 근거로 2004년에 재무부 장관을 의장으로 20개 금융기관 대표들로 구성된 금융이해력 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금융교육을 지원

○ 일본

- 일본 경제교육센터(재단법인)은 출판, 영상, 경제교육 연구, 모델교재 등 다각적인 사업을 실시 (1968년 설립)
- 일본은 2005년 7월 「경제교육 추진에 관한 계획」을 발표하고 경제교육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

○ 우리의 경우에는 민간역량의 부족으로 대표성을 갖춘 비영리단체조차도 없는 상황으로 체계적 시스템이 부재

□ 금융교육의 강화 추세

○ 학교 경제교육의 일환이었던 금융교육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금융교육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도입

- 특히 OECD의 금융이해도 프로젝트(Financial Literacy Project)와 더불어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에서는 정부 주도로 필요한 기관을 만들어 금융교육 강화

- 신설된 금융교육 기관은 최근 급성장

-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각 국 단위로 금융교육 실태 조사, 이해도 측정, 보고서 발표 등을 활발히 전개

- 특히 특정 연령대 및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교육이 실시

- 어린이, 청소년, 금융문제가 있는 계층 등

○ OECD 연구는 금융교육 관련 원칙과 good practice를 제공

- 금융교육과 광고를 차단하고 초등학교 과정부터 금융교육 도입하는 계기를 마련

- 금융교육을 저축, 부채, 보험, 연금 등을 평생에 걸쳐 활용하는 방법 설명

- 최근 금융위기 경각심 높아지면서 전 세계적인 추세

○ 금융교육의 중요성 부각

- 금융이해도 수준이 변화하는 환경에 비추어 너무 낮음.

- OECD 국가 대상 서베이 결과 교육수준이 낮고,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금융이해도가 낮은 악순환

- “오늘 날 금융은 한 세대 전에 비해 대단히 복잡해졌다. 40년 전만해도 은행에서 구좌 관리만 할 수 있으면 충분했다. 그런데 현재의 소비자는 광범위한 금융상품과 서비스 및 이를 제공하는 기관을 잘 알아야 한다. 과거 세대는 상대적으로 부채도 적었고 금융에 대한 이해도 별 필요도 없었지만 현 세대는 복리 개념부터 잘못된 금융 판단의 결과가 주는 의미까지 잘 알아야 한다(Alan Greenspan, 2005)”.
- 금융이해도가 높아지면 그만큼 사회결속력도 높아짐.
 - “금융교육은 개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발전된 사회는 사회 결속력을 경제발전의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하여 이를 보다 공고히 하고자 한다. 그런데 사회결속력은 국가 내 심각한 불균형이 생긴다면 그만큼 취약해질 수 있다. 국가 내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모든 사람이 부의 창출과 분배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금융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Donald Johnson, OECD 사무총장, 2005)”.

□ 각국의 금융교육 강화 위한 제도화 노력

○ 미국

- 미국은 금융이해도와 교육 개선 법에 의거해 Financial Literacy and Education Commission을 2003년에 만들었음.
- 정부와 민간부문이 금융이해도를 높이고 교육 강화 목적
- 연방정부의 금융교육을 조정하고 금융교육 위한 국가 전략을 추진하고 국가적인 금융교육웹사이트를 운영

○ 영국

- 금융서비스와 시장 법령에 의거해 2000년에 Financial Service Authority(FSA) 설립
- FSA는 규제기관으로 소비자 교육 위탁
- 시장에서의 금융시장의 신뢰성 유지하고 금융체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며 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 범죄 예방
- 영국에서는 FSA 외에도 금융교육 수행하는 기관이 다양하지만 FSA는 좀더 포괄적이고 규제 관련 사안에 집중

○ 호주

- 2004년 Financial Literacy Foundation(FLF)를 만들어 학교 및 직장에서의 소비자 및 금융교육 강화

□ 금융교육 강화에 대한 평가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금융 교육이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했는지, 즉 소비자 이해를 증진시키며 사람들의 행동 변화 수반시켰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 평가: Braunstein(2002)

- O'Connell(2007), Dixon(2006) 등에 따르면 학교 기반 금융교육은 행동 변화를 가능케 하고, 직장 교육은 다수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가져오는 유효한 방법으로 평가

- 자발적인 분야나 동료 간 네트워크는 금융 교육 전달에서 커다란 영향력 행사

- Lyons(2006)은 미국의 금융교육에 대한 의미 있는 평가를 위해서는 "electronic evaluation toolkit"이 필요하다고 지적

- 평가 매뉴얼과 더불어 교육기관은 평가 도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

○ 교훈

- 부가 경제교육 위한 지원 강화

- 미국, 캐나다, 영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더 나은 소비자 정보와 교육 기능 수행하기 위한 재정 지원 강화

- 지방 교육기관(우리나라 경우 지방 교육청), 경제교육 수행 기관, 소비자 단체 등과 연계해서 소비자 이슈 관련 전반적인 교육 체계 수립

- 정부 지원이 있는 경우 성공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사후 평가 시스템 필요

- 미국의 경우 시험, 서베이 등 객관적인 수단을 동원해 참가자들의 태도, 지식, 행태 등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도록 제안

IV. 경제교육 수요, 어떻게 늘릴 수 있나?

1. 경제교육 공급체계 개선을 통한 수요 증진 방안

□ 학생의 교과목 선택권 강화를 통한 경제과목 수요 증대

— 우리나라 사회 과목은 교사공급 측면의 이해관계에 의해 심하게 왜곡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특히 학생들의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단시일 내에 일반사회과목의 시수 및 교사 공급체계를 개선할 수는 없지만 경제학계는 이런 현실을 주시하고 지속적으로 개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

□ 경제과목 교육의 연속성 유지 필요성

○ 현재는 경제과목을 4학년(경제생활과 바람직한 선택), 6학년(우리 경제의 성장과 과제), 9학년(민주시민과 경제생활, 시장경제의 이해), 10학년(국민경제와 합리적 선택)에서 배우고 있음.

○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10학년에서 배우는 거시 관련 내용을 9학년으로 내리고 10학년에서는 7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다룰 예정임.

○ 현재 10학년에서 다루는 거시경제과목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11학년 이후 심화선택 과목에서 경제과목을 선택할 경우가 줄어들어 가뜩이나 경제과목을 배우는 학생이 적는데 그 수가 더욱 줄어들 수 있음.

⇒ 현실적 수업 운영과 경제과목 학습의 연속성 차원에서도 거시관련 내용을 10학년에서 유지하는 방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교과목 개정 과정에 대한 제언

○ 교육과정 개발 및 개정이 교육부와 교육부의 위탁을 받은 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교과과정이 기존 교육 공급 체계 틀 내에서만 검토되어 왔음.

— 그러므로 기득권 집단의 이익이 상당부분 그대로 유지되고 때로는 확대되어지기도 함.

-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 연구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음.
 - － 사회과 교육과정 자문위원 15명은 5명의 초중고 교장, 10인의 교육 관련 교수로 구성되어 있음(지리 교육 3인, 사회교육 4인, 역사교육 2, 교육학 1인)
 - 사회과 교육과정 공동연구위원 역시 교사와 교육 관련 교수들로만 구성
 - 사회과 교육과정 협력연구위원 역시 전원 교사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구성
 - 교과목 개정의 근본 목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사회 변동, 국가 사회적 요구 등을 감안할 때 교육 공급 체계 및 교육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교과 과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 현재는 일반사회 과목 중 경제 관련 내용의 교육과정 개발 및 개정 작업 역시 경제학계 및 경제계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경제학계의 소수의 인사 참여로 이루어져 왔음.
 - 향후 학회 차원에서 참여 방안을 검토
- ⇒ 교과목 개정 과정 시 교육공급 체계 내에 있는 이해 당사자 외에 사회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교사 공급 체계 개선 통한 양질의 교육 기회 제공

- 박명호(2006)에 따르면 교사의 경제인지도가 매우 낮으며, 경제관 역시 합리적 근거보다 감정적 요소가 많이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
 - － 교사의 낮은 경제 이해도는 우리의 교사 공급체계를 보면 그 이유가 어느 정도 설명되어질 수 있음.
 - － 교사가 특정 주제를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하기 위해서는 현안 과제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교사의 경제교육 및 연구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일반사회과 교사의 교육, 연수 규모는 매우 미미한 수준임.
- ⇒ 경제 관련 내용을 가르치는 교사의 경제과목 이수를 보다 강화하는 방안 및 경제학 전공자의 교사 임용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교사의 경제 이해도를 제고시켜야 할 것임.

2. 정부 역할 강화 통한 경제교육 지원

□ 경제교육 강화로 인한 사회적 후생 증진

- 합리적 사고로 인한 거래비용 감소
 - － 거래비용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30~40%
 - － 그 중 합리적 사고의 함양으로 사회적 거래비용을 줄이는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는 매우 클 수 있음.
 - － 시장경제 질서 구축으로 인한 제도개선 효과 역시 총요소 생산성 증대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
- 개인의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인해 국가 경제의 부담을 주는 사회문제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경제교육은 일종의 공공재 성격을 지님.
 - －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에서도 정부가 NCEE 등 민간단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입법 행위를 통해 경제교육 기회를 적극적으로 확대시키고 있음.

□ 경제 선진화 조건으로서의 경제교육

- 현 시점에서 우리 사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는 경제교육의 강화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점에서 경제교육 영역에서의 정부 지원은 절실하다고 하겠음.
 - － 정부 행위에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경제교육 지원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경제교육 관련 실태조사, 교재개발, 강사지원, 조사 연구 차원에서 민간과 정부 부처 간 상호 업무 협조 및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경제교육 관련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 하겠음.
 - ⇒ 경제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경제교육은 실제로 경제교육을 주관하는 민간 경제 단체들과 학계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고, 정부는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이 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에 그쳐야 할 것임.

3. 민간단체의 지원 강화

- 청소년 및 경제교사 등에 대한 경제교육 강화는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기업 활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임.
 - － 현 시점의 청소년 대상 경제교육 강화는 결국 미래 우리 기업을 위한 투자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음.
- 현재 경제 단체 및 금융기관들은 자신 기관의 고유한 사업 영역 내에서 경제교육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데 이런 경제 단체들의 경제교육은 자칫 다가오는 특정 기업이나 단체의 홍보와 혼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적지 않음.
 - ⇒ 경제 단체들은 일선에 직접 나서서 경제교육을 직접 실시하기보다는 경제교육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이나 학계 등을 지원해 주는 간접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음.

4. 경제이해력 인증시험의 도입

□ 「경제이해력 인증시험」 도입을 통한 경제교육 수요 증대

- 우리나라가 경제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경제 주체들이 경제적 사고와 지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경제 행위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
 - － 특히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대학생과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시민들의 경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식은 개인의 풍요로운 경제생활과 경제강국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따라서 학생이나 시민, 기업체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이해력 인증시험」을 개발하여 이를 실시함으로써 경제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음.
 - － 학생들의 상급학교 진학이나 공공기관, 기업 등의 취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있는 표준화된 평가 도구를 개발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음.
- 「경제이해력 인증시험」은 대내외적으로 공인된 기관에서 사회적 수요와 경제·사회적 효과 등에 대한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에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효과가 더 클 수 있음.

- 국내에는 영어·한국사·한자 등 해당 과목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습득, 그리고 국가·사회적 편익을 목적으로 여러 가지 국가 공인 검정 시험이 운영되고 있음.
- 국내에서는 도입되고 있지 않지만 음악 분야에서 등급시험은 음악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지속적으로 음악 교육 수요를 창출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 「경제이해력 인증시험」은 경제교육 수요 증진에 크게 기여하리라 사료됨.
- 기존 경제 관련 시험 문제는 출제자들에 따라 문제의 유형, 내용 및 변별력 등에서 변동성이 매우 컸다고 할 수 있음. 그렇게 때문에 응시자들이 시험 준비를 위한 시험공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했음.
- 「경제이해력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출제 경험이 많은 경제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시험문제를 출제 관리한다면 응시자들이 정상적인 경제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가 가능
- 「경제이해력 인증시험」이 도입되는 경우 우선 대학에서 경제원론 및 기초 경제과목에 대한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이고 이것이 다시 중고등학교 과정에도 영향을 미쳐 청소년의 경제교육 수요도 증대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
- 「경제이해력 인증시험」이 도입되는 경우 기업은 인재를 채용하거나 내부 인력의 승진 임용 시에 인증시험을 활용할 수 있음.
- 개별 기업 단위에서 이런 시험을 관리하는 경우 사회 전체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지만 공인된 기관에서 「경제이해력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음.
- 「경제이해력 인증시험」이 사회적으로 정착되어지는 경우 우리 국민의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증대되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합리적인 경제정책 선택 기회가 확대되어지리라 기대됨.
- 일반 국민의 경제마인드를 함양시켜줄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이해력 인증시험」은 공적 기능을 지니고 있음.
- 음악에서 등급시험이 영국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호주 등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지듯이 「경제이해력 인증시험」 역시 우리나라에서 시작하여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됨.

- 기업의 인사제도가 이미 잘 정착된 선진국의 경우 「경제이해력 인증시험」을 채용 및 승진 시 직접 고려하기 어렵겠지만 중국, 인도, 러시아 등에서는 「경제이해력 인증시험」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임.

□ 참고: 음악 등급 시험

- 음악 분야에서는 개인의 음악적 성취를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시험을 음악 등급시험이 있음.
 - 흔히 Grade시험이라 부르는 음악등급시험의 자격은 각종 악기의 실기나 음악이론, 또는 앙상블 등을 필기나 실기시험을 거쳐 획득하고 있음.
 - 실기시험은 악곡의 연주와 함께 시창과 청음 등의 시험이 포함.
 - 이론시험은 악전, 대위법, 화성법, 작곡법, 악곡분석 등의 능력을 필기 시험을 통해 테스트
- 음악 등급시험은 양질의 음악 교육을 가능케 하면서 동시에 음악교육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키는데 기여
- 음악등급시험은 영국의 Trinity College의 Trinity 음악 등급시험, 그리고 ABRSM, 호주 국내에 board가 있는 AMEB 등이 있음
- Trinity college
 - 영국의 명문 학교인 Trinity College에서 만든 음악등급시험으로 현재 세계 16개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국제적인 규모의 시험
 - 악기에 대한 실기능력시험과 음악이론 시험이 있고 실기와 이론이 병행되지 않기 때문에 음악의 실기 또는 이론만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이 응시하는 편임.
- ABRSM (Associated Board of the Royal Schools of Music)
 - 영국 왕립음악원 산하의 4개 학교에서 연합하여 만든 시험으로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를 갖고 있는 시험
 - 2007년 현재 세계 98개국에서 이 시험을 응시할 수 있으며 35가지의 악기와 음악이론, 재즈, 합창 등 음악에 관한 여러 가지의 시험을 볼 수 있음.

○ AMEB(Austrian Music Examinations Board)

- 현재 호주에서 가장 많이 응시하고 있는 음악등급시험으로 1887년 에들레이드 대학과 멜번 대학에서 태동되어 1918년 전국적인 규모의 기구가 발족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시험
- 음악 외에도 스피치와 드라마, 발레 등의 등급시험을 이 기구를 통하여 볼 수 있음.

○ 보통 자격시험은 각자가 치른 시험 점수로 판정하는 것과 달리 음악등급 시험은 본인이 자신의 실력에 맞는 등급의 시험을 본 후 점수에 따라 자격의 여부를 판정받는 방식임.

○ 음악등급 시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

-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
- 사립학교 등에서 장학생 선발 시, 혹은 좀 더 명성 있는 학교로 전학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음악 실기교사가 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
- 음악대학이나 교육대학을 나오지 않고도 각 급 학교에서 음악실기교사가 될 수 있는 방법임.

＜ 참고문헌 ＞

- Braunstein, Sandra, and Carolyn Welch. 2002. "Financial Literacy: An Overview of Practice, Research, and Policy." *Federal Reserve Bulletin* (November): 445-457. Washington.
- Dixon, Mike. 2006. *Rethinking Financial Capability: Lessons from Economic Psychology and Behavioural Finance*. London: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 Johnston, The Hon. Donald J. 2005. *Importance of Financial Literacy in the Global Economy*. Keynote address to the "Financial Education Summit." Kuala Lumpur. December 12, 2005.
- Lyons, Angela C., et al. 2006. "Are We Making the Grade? A National Overview of Financial Education and Program Evaluation." *Journal of Consumer Affairs* (December).
- O'Connell, Alison. 2007. *Measuring the Effectiveness of Financial Education*. Discussion Paper prepared for the Retirement Commission for a seminar to be held April 19, 2007. Accessed at http://www.retirement.org.nz/files/Measuring_effectiveness_of_financial_education_OConnell_published_April07.pdf
-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05a. *Draft Recommendation on Principles and Good Practices for Financial Education and Awareness*. DAF/CMF (2005)13. Paris: OECD.
-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05b. *Improving Financial Literacy: Analysis of Issues and Policies*. OECD.
-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05c. *Improving Financial Literacy: Analysis of Issues and Policies*. Announcement of publication and outline of publication. OECD website.
-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05d. *Recommendation on Principles and Good Practices for Financial Education and Awareness.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Paris: OECD.
-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05e. *Thirty Principles and Good Practices for Financial Education and Awareness*. Paris: OECD.
-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06a. G8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mproving Financial Literacy. November 29-30, 2006.
-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06b. "The Importance of Financial Education." *OECD Observer*, July 2006.
-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06c. OECD Conference on Financial Education. September 21-22, 2006.
-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07. *OECD's Financial Education Project*. Pp. 223-228. Retrieved February 5, 2007.

박명호, 청소년 경제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교사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경제학회 발표논문 2006

재정경제부, 경제교육 활성화 및 법제화 필요성, 2007.10

전홍택 · 김진영, 청소년 학교경제교육 실태에 관한 한 · 미 · 일 비교, 2006.

최병모, 김정호, 허인숙, 세계화와 지식기반경제시대에서의 학생들의 시장경제인식 및 의식의 현 상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경제교육연구, 11(1), 한국경제교육학회, 83-108, 2004.

지정토론

이승철(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지정토론

전택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교수)

